

## “광주공항 국제선 잔류 허용”

### 李建교 “광주~무안 고속도 개통까지 항공사가 판단” 내일까지 희망서 제출...‘김대중공항’ 명칭 긍정 검토

광주공항의 국제선이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내년 6월 이후 무안공항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완공 전까지는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광주에 잔류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공항에서 이미 취항하고 있는 국제선에 한해서는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는 시점까지 해당 항공사가 희망하는 경우로 잔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건교부는 지난 10월 초 광주공항에 취항중인 광주~상하이 등 13개 국제선에 대해 오는 9일부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기본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못박고,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관광업계의 항공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항공사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신설 또는 증편되는 경우는 무안국제공항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며 “잔류를 희망하는 항공사는 3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건교부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엔 모두가 무안공항으로 오게 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장관은 광주공항 국내선은 현재와 같이 운영될 것이며, 광주군 공항의 이전은 국방부장관도 동의했지만 어디로 언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 ‘DJ공항’ 등 광주·전남이 합의해 공동으로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광주~무안고속도로와 목포~광양고속도로 조기 완공▲호남고속 철도 무안경유 적극 검토▲신규 취항사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부여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도 약속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국민 5명중 1명 ‘빈곤자’

도시기구 상대빈곤율이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중 1명은 ‘상대빈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최근 기획재정부·민생대책본부에 ‘소득 분배 및 공적·민생·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기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득 인구의 비율)은 작년에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경상소독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봐도 상대빈곤율은 작년에 14.59%로 1999년의 14.52%를 넘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45%, 경상소득 기준 16.51%, 가처분소득 기준 16.43%였다. 국민 5.4명중 1명은 상대 빈곤에 빠져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11월에 접어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풍경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광주시 동구 금동 한 인쇄소 직원들이 2008년 새 달력 제작에 분주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의정비 인상 제동장치가 없다

### 심의위원 절반 의회가 선정...주민 의견수렴도 형식적

### 나주시의회 75.2% 인상

광주·전남 각급 지방의회가 주민 여론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무시한 채 무더기로 의정비를 인상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심의 내용 공개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현행 법에 ‘불법·편법’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현재 의정비를 확정된 전남지역 12개 시·군의 평균 인상은 33.4%에 달한다. 나주시 75.2%를 최고로 목표시는 58.9%, 여수시와 장성군은 5%를 인상, 전남도내 최고인 나주(4천500만원)와 최저인 고흥(2천489만원)의 격차는 무려 2천만원에 달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15조2항)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행정복지학부)는 “각 시·군별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장이 심의위원을 5명씩이나 추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부실하게 구성된 심의위가 의회 입맛에 맞게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시·군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의정활동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동결’이나 ‘불가인상률 만큼’ 등의 의견을 먼저 제시했지만 이를 무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형식에 그쳐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 이상 인상은 주민투표를 거쳐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돼 있는 심의위의 구성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나 의회가 마치 매년 일시에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돼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우일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 전군표 국세청장 오늘 영장

### 현직 청장으로 첫 소환...소청장 뇌물수수 부인

전군표 국세청장이 1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관련기사 3면〉

전 청장의 수뇌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은 1일 오전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구속 중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상근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 시키되 벌리검토 등을 거쳐 2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청장의 신분이 피내사자에서 피외자로 바뀔 수 있다”고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 세정 최고책임자가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전 청장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에게 “국민들께 죄송하다. (6천만 원 수뇌 혐의 등은) 다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뒤 곧

바로 10층 특수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우선 전 청장이 지난해 8월과 9월 1천만원씩과 10월 2천만원, 11월 1천만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고, 정씨가 봉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긴 뒤인 올해 1월 1만달러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청장 부부와 자녀 등 친인척 10여명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찾아낸 일부 의심스러운 흔적까지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김진 기자·연합뉴스